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옥 태 환
(통일환경연구실 연구위원)

민족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배경

○ 한국은 작년 12월 외환위기에 직면, 미국주도의 IMF 관리체제하에 있음.

- 한국은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의 對한국 지원과 투자를 확대시키는 한편,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여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동북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미 양국정부가 정상차원에서 경제·안보협력과 대북정책 현안들을 조율하고 협력할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을 6월 9일 워싱턴에서 개최함.

회담성과

○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개혁 의지 및 김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해 미국의 신뢰를 획득함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추락한 국가신인도 회복의 토대를 마련함.

○ 김대통령의 경제외교 성공으로 경제위기를 조속히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됨.

- 「한·미 투자협정」 체결과 「해외투자보증공사」(OPIC)의 투자보증사업 재개 합의로 한국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외국투자가들에게 전할 수 있어 한국정부가 추구하는 개혁작업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함.
- 한국에 외환위기가 재발하는 경우 미국의 주도로 G7 등 13개국이 IMF 프로그램에 따른 제2선 방어자금 80억달러를 제공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함으로써 한국의 제2 외환위기 도래 가능성에 대한 외국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킴.
- 「한·미 경제협의회」의 재가동으로 양자간의 경제현안 뿐만 아니라 다자차원의 협력방안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21세기를 향한 한 차원 높은 경제 동반자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김대통령의 '햇볕정책'과 클린턴 대통령의 '연착륙정책'이 대북 '포용정책'이라는 공통분모를 찾음으로써 대북정책을 두고 야기되었던 한·미간 갈등이 크게 해소되었음.
- 4자회담과 남북대화의 상호 보완적 병행 추진을 합의, 한반도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됨.
- 미국은 남북관계의 진전 정도에 따라 대북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한국정부의 상호주의 원칙을 지지함.

고려사항

○ 우리정부 개혁프로그램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바, 특히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여 방미 기간중 합의한 사항들이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남북문제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는 바, 앞으로는 대북정책을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함.

- 정경분리 정책에 따른 민간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bottom to up' 방식으로 북한의 변화와 개방 유도
-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를 신축적으로 운영, 당국간의 긴밀한 접촉 유도
- 금강산 개발 등 남북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투자 활성화

○ 남북이 함께 겪는 위기를 민족화해의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보다 큰 차원에서 전향적인 대북 접근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IMF체제하에서도 가능한 재원을 동원,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 및 비료지원 등을 추진
- 남북간 철도 복원과 여유전기 송전 등으로 실질적인 북한경제 회복 지원

- 목 차 -

Ⅰ. 배경 1

Ⅱ. 회담내용 3

1. 경제분야 3
2. 대북정책 4

Ⅲ. 성과 및 평가 6

1. 종합평가 6
2. 경제분야 7
3. 대북정책 9
4. 기타 10

Ⅳ. 주변국 언론의 반응 12

1. 미국 12
2. 일본 13
3. 중국 13
4. 러시아 14
5. 북한 14

Ⅴ. 고려사항 16
1. 경제분야 16
2. 대북정책 17
3. 기타 18

부록: 「서울포럼」과 「美대외관계협의회」의 공동건의안 19

Ⅰ. 배경

○ 한국은 작년 12월 외환위기에 직면, 미국주도의 IMF 관리체제하에 있음.[1)]

- 한국은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최근 미국의 행정부와 기업계 등은 한국정부의 개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들 정책이 실제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미국언론들도 한국의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 대하여 부정적인 보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더 많은 미국여론 지도층이 한국의 개혁의지를 믿을 수 있도록 한국이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한국이 IMF 관리체제를 하루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 조야의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어서 對韓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함.

---

1) 한국의 경제위기를 미국인의 세금으로 돕는 데는 '도덕적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미국조야에 팽배하여 루빈 재무장관은 개입에 주저함. 그러나 외환위기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국방성의 주장과 미국의 5대 수출상대국인 한국을 살리는 것이 미국경제에 유익하다는 월가(Wall Street)의 견해에 따라 클린턴 정부가 한국지원을 결정했음.

○ 또한 4자회담과 남북대화, 경수로지원 사업 등이 답보 상태에 있어 효율적인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한·미간의 조율과 공조가 절실한 실정임.

- 4자회담은 2차 본회의 이후 3차회의 일정도 못잡고 있으며, 남북회담은 북경 차관급회담(98.4.11~18) 이후 답보상태에 있음.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의 對한국 지원과 투자를 확대시키는 한편,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여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동북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미 양국정부가 정상차원에서 경제·안보협력과 대북정책 현안들을 조율하고 협력할 필요성이 대두함.[2)]

2) 이러한 상황하에서 「서울포럼」과 「미대외관계협의회」(CRF)는 정상회담 직전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조율 개선책 등 대북 제반정책에 관한 연구결과를 공동건의안 형태로 양국정부에 제출하였음(부록 참조).

Ⅱ. 회담내용

1. 경제분야

○ 「한·미 투자협정」 체결 원칙 합의

- 상대국에 기업설립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
- 연내에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국회비준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

○ 「한·미 경제협의회」의 재가동 합의[3]

- 정부채널의 경제협의체로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미국이 정부차원에서 지원

○ 「한·미 항공자유화협정」 체결[4]

- 양국 국적기의 상대방 모든 지역 운항가능
- 상대국을 경유 제3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以遠權 허용

○ 미국 「해외투자보증공사」(OPIC)의 對韓 투자보증사업 재개 합의[5]

---

3) 동 협의회는 95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임. 한국 외교통상부 차관과 미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을 위원장으로 금년 하반기에 회의를 개최, 미국의 對韓투자, 무역사절단 파견, 양국간 기업교류 지원, 양국간 무역현안 등을 신속히 해결한다는 방침임. 또한 동 협의회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아·태경제협력체」(APE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차원의 협력방안도 모색할 예정임.

4) 동 협정은 국회 비준 절차없이 서명과 함께 발효됨.

5) OPIC는 국무부 산하 연방기구로 미국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전담기구임. 미

- 미국기업의 對韓 투자시 대출, 보증, 투자보험 재개

○ 미국의 對韓 투자조사단 파견

○ 미국의 제2방어 자금지원 존재 재확인

- 외환위기 재발시 미국 주도로 IMF를 통해 80억달러 지원

○ 한국 유학생에 대한 취업기준 완화 등 지원 약속

2. 대북정책

○ 공고한 한·미 안보동맹 재확인

○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6]

- 정경분리원칙과 햇볕론으로 북한의 개방 유도

○ 4자회담과 남북대화 병행추진 합의

- 한반도 문제의 한국주도 인정

국은 91년부터 한국을 노동환경 열악국으로 분류 OPIC의 對韓 지원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김대통령 취임 이후 노동환경이 크게 개선 된 점을 인정, OPIC의 對韓 투자 보증사업을 재개하는 데 합의함.

6) 김대통령은 북한이 어느 정도 상응한 태도를 보인다면 미국이 대북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데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클린턴 대통령은 이러한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이 양국의 공동 가치에 부합하므로 적극 지지한다는 견해를 피력함.

○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개선의 조화 유지

○ 경수로사업 분담금, 미국의 대북 중유지원 비용 부담 원칙 재확인
  - 한국은 경수로 분담금 중 70%, 미국은 중유지원 비용 전액을 책임지기로 함.

3. 기타

○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체결[7]

○ 동북아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상호 협력 및 보완적인 역할 분담 협의

---

7) 동 조약은 21개 조항에 걸쳐 인도대상 범죄와 인도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 조약은 양국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비준서가 교환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함.

Ⅲ. 성과 및 평가

1. 종합평가

○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개혁 의지 및 김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해 미국의 신뢰를 획득함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추락한 국가신인도 회복의 토대를 마련함.

- 김대통령은 정상회담과 美上下兩院 합동연설회 등 20여 차례의 연설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혁의지를 강조함으로써 미국 조야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냈음.

○ 김대통령의 경제외교 성공으로 경제위기를 조속히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됨.

- 「한·미 투자협정」 체결과 오는 8월 對韓 투자조사단 파견에 합의함으로써 해외 투자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8)]

---

8) 김대통령의 방미중 「수출입은행」은 미국의 「JP모건사」를 주간사로 20억달러의 협조융자를 8월중 들여오기로 했고, 「미국수출입은행」(EXIM)은 20억달러 규모의 중·장기 무역 금융차관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단기 수출보험 한도도 7억5천만달러에서 10억달러로 증액하기로 함. 「세계은행」(IBRD)도 2차 지원금 50억달러 중 20억달러를 연내에 제공하기로 합의함. 「대한생명」은 「뉴욕메트라이프 생명보험」으로부터 지분 50% 양도 조건으로 10억달러를 들여오기로 했고, 김종훈 前 「유리시스템」 대표가 2억달러를 「조흥은행」에 투자하기로 약속함. 그외에도 「GM」 등 미국기업들과 약 100억달러 정도의 외자유치 협상이 진행중이며, 50~60억달러는 성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한반도 안보 및 대북정책 관련, 양국정상은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의견일치를 보임으로써 한·미간 동반자관계를 한차원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함.

- 북한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포용정책이 한·미의 공동가치에 부합함을 확인

2. 경제분야

○ 「한·미 투자협정」 체결 합의로 한국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외국투자가들에게 전할 수 있어 한국정부가 추구하는 개혁작업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함.

- 동 협정 체결은 미국기업의 첨단기술과 한국기업의 생산기술 및 아시아지역에 대한 마케팅기술을 결합하는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고
- 미국의 對韓투자 증가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해외투자보증공사」(OPIC)의 투자보증사업 재개 합의는 한국의 노동권 보호가 국제수준에 이르렀음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어 노동시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상당부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9)]

9) OPIC는 자체 조사결과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의 회원국으로 복수노조 및 제3자 중재,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당 노동시간도 60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어 국제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음(「연합뉴스」, 1998.6.10).

- 한국정부도 노동문제에 대해 정당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됨.

○ 한국에 외환위기가 재발하는 경우 미국의 주도로 G7 등 13개국이 IMF 프로그램에 따른 제2선 방어자금 80억달러를 제공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함으로써 한국의 제2 외환위기 도래 가능성에 대한 외국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킴.

- 인도네시아 사태에 이어 「엔」저 현상의 지속으로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한국에 제2 외환위기 가능성을 예상, 투자를 꺼리고 있는 외국투자가들의 우려를 상당부분 완화시키는 효과 기대

○ 「한·미 항공자유화협정」 체결로 세계 항공시장중 가장 잠재력이 큰 아·태 항공시장에서 양국 항공업계가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 한국 국적기의 미국전역 운항권과 미국을 경유 제3국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원권을 확보 함으로써 연간 1억달러 이상의 수익증가 및 비용절감 효과 기대

○ 「한·미 경제협의회」의 재가동으로 양자간의 경제현안 뿐만 아니라 다자차원의 협력방안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21세기를 향한 한 차원 높은 경제 동반자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미국수출입은행」(EXIM)의 20억달러 차관제공은 환란이후 최초의 미국정부 공적자금 지원으로, 위기시 한국을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국제금융시장에 확인시켜준 것으로 한국의 대외신용도가 크게 개선됨.

- 미국의 공적자금 지원은 국제금융 시장에서는 지원액의 수 십배의 영향을 미침.

3. 대북정책

○ 김대통령의 '햇볕정책'과 클린턴 대통령의 '연착륙정책'이 대북 '포용정책'이라는 공통분모를 찾음으로써 대북정책을 두고 야기되었던 한·미간 갈등이 크게 해소되었음.

- 김대통령의 대북3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개선 노력 전폭 지지

○ 4자회담과 남북대화의 상호 보완적 병행 추진을 합의, 한반도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됨.

- 이산가족문제, 교류협력 등 한반도 문제는 남북대화에서 한국이 주도
- 평화체제, 군축문제 등은 4자회담에서 한·미간 긴밀한 공조하에 추진

○ 미국은 남북관계의 진전 정도에 따라 대북경제 제재를 단계적으

로 완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한국정부의 상호주의 원칙을 지지함.

- 클린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지도자들이 김대통령의 제안에 동의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하여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지지
- 남북관계 개선 정도에 따라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해제, 미국은행을 통한 대북송금 허용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나갈 것으로 예상

○ 미국이 앞으로 더 이상 한국에 대해 중유비용 분담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여 중유비용을 두고 야기되었던 논란을 사실상 매듭지었음.[10]

4. 기타

○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양국간에 사법제도적 공조체제를 갖추게 됨으로써 우리의 국제사법 공조체제를 한 단계 높인 계기가 됨.

- 동 조약 체결로 우리의 인권 개선상황이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계기 마련

10) 경수로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분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문제가 조기에 타결되어야 함.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는 6월 29~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사회를 열어 총공사비 조정과 미국측의 분담 문제에 대해 최종 절충을 벌일 예정임.

미국이 더 이상 범죄인의 피난처가 될 수 없게 됨에 따라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전기 마련

Ⅳ. 주변국 언론의 반응

1. 미국

○ 미국 언론들은 김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김대통령을 '민주주의 신봉자'로 부각시키고, 한국경제 회생을 위한 세일즈외교와 대북정책 공조 노력을 높이 평가함.

- 「뉴욕타임스」(NYT)지(6.2)는 김대통령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클린턴의 대중정책과 같은 맥락이라고 소개하고, 이와 같은 대북정책 변화는 김대통령이 단순한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장기간 민주주의 전파자 역할을 했던 새로운 아시아 지도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논평
- 「워싱턴포스트」(WP)지(6.7)는 "미국정부는 한국이 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금융위기 해소를 선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서 "김대통령이 이룩한 한국의 민주주의가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보장할 것"이라고 논평
- 「로스엔젤레스타임스」(LAT)지(6.9)는 김대통령이 앞으로 미·중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

2. 일본

○ 일본 언론들은 김대통령이 미국민들에게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시 발전을 역설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유연한 자세변화도 부각시키고 있다고 보도함.

- 「요미우리 신문」(6.11)은 김대통령이 주요연설만 20회가 넘는 등 강행군을 펼치면서 대미 판촉활동에 몰두하고 있다고 보도
- 「아사히 신문」(6.11)은 김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미국의 지원획득이 목적이며, 이와 같은 활동으로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의 대외신용을 높일 수 있는 몇가지 선물도 얻었다고 평가

3. 중국

○ 중국 언론들은 이번 정상회담의 목적이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과 한반도 긴장완화에 있으며, 특히 한·미 양국은 북한이 김대통령의 포용정책에 호응해 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함.

- 「北京放送」(6.10)은 미국이 對韓 투자의 확대를 약속했으며, 북한에 대하여 호혜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현재로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소개
- 「新華通信」(6.11)은 김대통령의 방미는 미국이 남북교류를 지지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 주도록 미국을 설득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언급하고, 미국은 남북교류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대북제재를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보도

4. 러시아

○ 러시아 언론들은 정상회담에서 남북대화와 4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이 합의되었으며 한국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미국이 도와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을 중점 보도함.

- 「러시아방송」(6.10)은 클린턴대통령이 대북통상 제재조치의 점진적인 완화는 전적으로 북한이 서방나라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진전시켜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음을 소개
- 「이타르타스통신」(6.11)은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 경제난 극복을 도와준다는 약속을 한 것이 가장 중요한 회담결과라고 보도

5. 북한

○ 북한의 언론들은 김대통령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조선의 현당국자' 또는 '남조선의 현집권자'라고 언급하면서 그의 방미를 민족의 요구에 전면 배치되는 '구걸행각, 사대매국행각, 반통일행각'이라고 매도함.

- 「평양방송」(6.12)은 "남조선의 현당국자가 파국의 구렁텅이에

빠진 경제를 외국자본에 의존해서 살려 보려고 미국에 가서 구걸행각을 벌이고 있으며, 동아시아에 10만 미군의 계속 주둔과 통일이후 미군주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논평

민민전방송(6.14)은 "한·미공조를 구걸, 이 땅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으려는 분열주의자의 나상을 드러내는 반통일적인 작태를 하고 있다"고 논평

V. 고려사항

1. 경제분야

○ 우리정부 개혁프로그램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바, 특히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여 방미 기간중 합의한 사항들이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함.[11]

- IMF사태 해결 이후까지 고려한 장기적 전략 수립 필요

○ 투자협정 체결에 대비, 연내에 관련 국내법을 개정하고 각종 관행과 제도도 정비해야 함.

- 이 과정에서 내국인에게 불리한 역차별 배재
- 특정국가를 우대함으로써 나머지 다른 나라를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 요망

○ 좁은 시장에 미국자본이 집중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사전대책을 수립해야 함.

- 특히 외국의 자본과 상품에 대한 우리의 배타적 시각 개선 시급

11) 미국의 주요 신용평가 기관들은 구조조정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등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처능력을 보아가면서 국가신용등급을 재조정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국제사회도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이 원만히 진행되면 한국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2. 대북정책

○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남북문제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는 바, 앞으로는 대북정책을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함.

- 정경분리 정책에 따른 민간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bottom to up' 방식으로 북한의 변화와 개방 유도
-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를 신축적으로 운영, 당국간의 긴밀한 접촉 유도
- 금강산 개발 등 남북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투자 활성화

○ 남북이 함께 겪는 위기를 민족화해의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보다 큰 차원에서 전향적인 대북 접근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IMF체제하에서도 가능한 재원을 동원,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 및 비료지원 등을 추진
- 남북간 철도 복원과 여유전기 송전 등으로 실질적인 북한경제 회복 지원

○ 워싱턴의 평양 접근을 막지 않겠다는 김대통령의 기본입장 표명으로 미국의 대북 접촉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 되는 바,

- 북·미 접근이 적정속도를 넘지 않도록 한·미간의 공조를 강화해야 함.
- 북·미접근을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활용

○ 클린턴 방중(6.25)시 중국이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한·미간 외교적 실무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확보

3. 기타

○ 21세기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질서형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미 동맹관계의 강화·유지를 바탕으로 일·중·러와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의 구축을 모색함.[12)]

- 미국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한·미 정상간에 공감대를 형성, 동북아 신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 수행

12) 김대통령 방미후 클린턴 대통령은 6月 25日부터 중국을 방문하며, 7月末에는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총리가 미국을 방문하고, 10月에는 김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임. 한·일 정상은 향후 한·일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쉽'을 공동선언할 예정임.

<부록> 「서울포럼」과 「美대외관계협의회」의 공동건의안

○ 「서울포럼」과 「美대외관계협의회」(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는 전담연구진을 구성 약 7개월에 걸쳐 북한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 북한정권의 미래, 북한 변화의 유도 전망,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조율 개선책 등의 제반문제를 검토한 후 김대통령의 방미 직전 양국정부에 공동건의안을 제출하였음.[13]

- 동 건의안은 북한 정세분석에서 군부에 대한 노동당의 장악력 감소로 유사시 군부의 움직임을 통제할 안전장치가 없는 취약점이 있으나 북한은 이념적, 정치적 통제가 공고하여 김정일의 장기집권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 미국의 대북관계 목표는 한반도의 불안해소와 안정실현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미국은 한국정부가 주관하는 남북대화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건의
-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공조하는 한편,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일괄타결안(Package Deal)을 수립해야 하며, 주변 강대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구도 정착을 장기정책 목표로 두어야 한다고 건의함.

---

13) 동 프로젝트의 한국측 공동의장은 김경원 「사회과학원」 원장과 한승주 고려대 교수이고 미국측 공동의장은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대사와 몰튼 아브라모비츠 전 카네기 재단 총재임. 동 건의안은 98년 6월 1일 언론발표문 형식으로 공개됨.

○ 한·미 공동연구진은 공동건의안에서 한·미 양국의 과단성있는 대북접근책이 한반도 안정은 물론 미래의 긍정적 변화를 향한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의 11가지 정책지침을 양국 정부에 제안함.[14]

①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공동의 군사적 억지와 대비를 유지한다.

②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점진적 변혁을 도모하고 북한을 파멸시키는 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③ 북한의 긴급한 식량 사정을 고려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대북한 식량지원을 강화하되, 장기간에 걸친 대북 지원은 북한이 자체 경제에 대한 구조조정 의지를 표명하고, 식량 배급에 대한 적절한 감시체제를 허용하며 기타의 인도주의적 우려 사항에 대해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만 가능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④ 한·미 양국은 對북한 접촉에 있어 긴밀히 조율하고 보조를 맞추며 대북 교섭에 있어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한다.

---

14) 원래 CFR에서 12번째로 제안한 한반도 통일이후 한·미관계에 대한 정책제안은 한국측이 현시점에서 건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반대함에 따라 공동 건의안에서 제외되었으며, 미국측이 미정부에 별도로 건의하기로 함. 동 조항에는 통일이후 감축된 미군의 새로운 역할과 임무를 반영한 UNC와 CFC의 재편성 제의 등이 수록되어 있음. Morton I. Abramowitz & James T. Laney, "Managing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Report of an Independent Task Force Sponsored by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May 29, 1998 참조.

⑤ 북한이 시장 원리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정책을 바꾸도록 촉구하기 위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일부 완화를 포함하는 일련의 초보적 조치를 고려한다.

⑥ 북한이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고 군사적 위협을 축소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좀 더 광범위한 상호적 조치의 패키지를 고려한다.

⑦ 북한이 화해의 기회를 끝내 거부하고 위협을 제거하는데 동참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합의 및 긴급한 인도적 지원 외에는 북한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⑧ 한·미 양국은 대북한 정책에 있어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 주변 이해당사국과도 긴밀한 조율을 모색, 이들 3국의 협조를 도모한다.

⑨ 미국 정부 내에 한국 문제에 대한 고위 당국자의 관심과 의견 조율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⑩ 한·미 양국은 제네바 합의를 준수하고 이를 위한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의 활동을 지원한다.

⑪ 미국은 한국이 당면한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IMF에 대한 미국의 지분을 확대하는 등의 지원을 계속한다.

最近 發刊資料 案內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著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著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著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著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著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鄭永泰 著	6,000원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硏究	金國新 著	4,000원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余仁坤 金永椿 申相振외共著	10,000원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硏究	吳承烈 著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 민 著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著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재성호 著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著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著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전성훈 著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著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이우영 김영윤외共著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著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著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著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著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외共著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著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著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헌경 著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著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著	5,500원
96-29	韓·中 安保協力方案 硏究	崔春欽 著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著	5,000원
97-02	북·일 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著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著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著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著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외共著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 김수암 共著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著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著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著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계: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著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著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著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著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著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 민 著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著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계
정영태 著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著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著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著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著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윤 著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헌경 著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著 5,5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재성호외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

옥태환
전현준
재성호외共著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
송정호 共著 7,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8

최의철
송정호 共著 $11.95

■ 연례정세보고서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7 6,000원

97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7~1998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上)	10,000원
96-02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下)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統一硏究論叢,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統一硏究論叢,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統一硏究論叢,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統一硏究論叢,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 (1996)	6,500원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6 (1997)	9,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1) 가입방법 :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민족통일연구원)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전화:901-2604, 901-2559, FAX:901-2547)

절 취 선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근 무 처				
	직 위			
간행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FAX	
	전자메일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일반회원 ( ) 학생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민족통일연구원의 정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본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FAX: 901-2547)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 (예금주: 민족통일연구원)

※ 본 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신청서 뒷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統一情勢分析 98-03

發行處 民 族 統 一 硏 究 院
編輯人 民族統一硏究院 統一環境硏究室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 901-2527(代), FAX : 901-2543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8년 6월 일
發行日 1998년 6월 일